

산업안전보건법과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CONTENTS

1.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안전보건법의 개요
-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및 보험금 청구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해
 - 산업재해보상 청구
 -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대한안전교육협회
KOREA SAFETY EDUCATION ASSOCIATION

part.1 산업안전보건법

1. 산업안전보건법 개요

1)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가. 산업안전보건법의 목적

① 목적

- 산업안전 및 보건에 관한 기준 확립
- 책임의 소재를 명확히 함
- 산업재해 예방
- 쾌적한 작업환경 조성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고 증진

나. 산업안전보건법의 헌법상 근거

① 헌법상 근거

- 모든 국민은 근로의 권리를 가진다.
- 근로조건의 기준은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법률로 정한다.
-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② 헌법상의 근로조건

- 근로조건 : 임금이나 근로시간뿐만 아니라 안전과 보건, 작업 환경까지 의미
- 사업주는 작업 환경을 안전하고 쾌적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음

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재개정 역사

- 1953년 공포된「근로기준법」 제6장의“안전과 보건”을 바탕으로 근로안전규칙, 근로보건규칙 등이 제정되면서 태동
-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 제정·공포 노동청이 노동부로 승격
- 1987년 한국산업안전공단 설립
- 1990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전면 개정되며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체계가 개편
- 2019년 30년만의 전면개정을 통해 2020년부터 법 체계 전반이 정비 됨

2)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과 체계

가. 산업안전보건법의 구성

-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는 12장 15절의 175개 조문으로 이루어짐

※ 12장

- 제1장 : 총칙
- 제2장 : 안전보건 관리체제 등
- 제3장 : 안전보건 교육
- 제4장 : 유해·위험 방지조치
- 제5장 : 도급시 산업재해 예방
- 제6장 : 유해·위험 기계 등에 대한 조치
- 제7장 : 유해·위험 물질에 대한 조치
- 제8장 : 근로자 보건관리
- 제9장 : 산업안전 및 보건지도사
- 제10장 : 근로감독관 등
- 제11장 : 보칙
- 제12장 : 벌칙

나. 산업안전보건법

- 산업재해예방을 위한 각종 제도적 근거의 확보

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①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

- 1개의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 1개의 대통령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 3개의 고용노동부령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산업 안전보건 기준에 관한 규칙, 유해·위험 작업 취업제한에 관한 규칙)
- 세부적인 기준 및 절차 (고시, 예규, 훈령)
- 효력순위 : 법 > 시행령 > 시행규칙 > 고시
- 상위법령에 위배되는 하위규정은 그 효력이 발생하지 않음

② 하위 법령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 법에서 위임된 사항, 법 시행 대상범위, 종류 등을 설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 법 및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을 일반, 안전보건, 취업 제한 등 3가지로 구분한 내용으로 구성
- 고시

- 각종 검사·검정 등에 필요한 일반적, 객관적 사항을 널리 알려서 활용할 수 있는 표준적·수치적인 내용을 규정
 - 예규
- 행정 절차적 사항의 내용을 조문형식으로 규정
 - 훈령
- 상급 기관이 하급 기관에게 업무수행에 관한 훈시·지침 등을 시달할 때 내용을 조문 형식으로 규정
 - 지침
- 고시의 범주에 포함된 각종 기술상의 매뉴얼을 하나의 규범형식으로 작성
 - 표준
- 작업장 내 유해환경요소의 제거를 위한 기술상 모델인 작업환경 표준

③ 산업안전보건법령 계층 구조

			법적 성격	제·개정권자	심의
법			법령	국회	국회법사위
시행령			형사처벌 및 경제적 제재 병행	대통령	법제처
시행 규칙	안전보건규칙	취업제한규칙		고용노동부	
고시	예규	훈령	행정규칙	장관	부처 법무관실
↳	기술상의 지침	작업환경표준			

3) 주요 내용 및 특징

가. 산업안전보건법의 주요 내용

-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업주 및 근로자의 기본적 의무 명시
- 산업안전보건 정책, 수립, 집행, 조정 및 통제 등 정부의 책무 명시
- 유해·위험성이 있는 사업에 안전보건관리책임자와 안전관리자 및 보건관리자 선임, 산업안전보건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안전보건 관계자 및 근로자에 대한 안전 보건교육 실시
- 작업환경이 인체에 해로운 사업장에 대한 작업환경 측정 및 기록, 근로자 건강 진단 실시
- 산업재해 예방 시설의 종류와 설치, 운영방법 및 정부의 지원육성방안 규정, 산재 예방에 관한 과학기술 진흥과 연구개발을 추진 및 그 성과 보급

나. 산업안전보건법의 특징

① 근로기준법과 유기적인 연계

- 사용자에게 대하여 행정기관의 지도 감독, 형벌을 토대로 최저기준을 준수하기 위한 감독법
- 근기법, 산안법
-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의 공조체제 필요

② 전문기술성

- 유해·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한 전문 기술성
- 90% 이상이 안전보건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
- 공학, 의학, 의학 등 다양한 학문적 배경지식 필요

③ 복잡방대성

- 산업현장의 모든 분야에 대한 안전과 보건 규범
- 시행령, 시행규칙, 훈령 등 방대한 내용

④ 의무주체의 다양성

- 노무를 제공받아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
- 사업주에 사용되는 근로자
- 사업주 및 근로자 외에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의 확보 및 쾌적한 직장환경 조성에 관계있는 자

⑤ 강행성/규제성

- 산업현장의 안전보건책임
- 근로자와 정부에 대해서도 의무와 책임 부여

다.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범위

- 모든 사업에 적용함
- 아래의 경우를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는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유해·위험의 정도
 - 사업의 종류
 -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수 등
- 일반 사업장뿐만 아니라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정부투자기관에도 적용

4) 용어의 정의

가.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용어 정의

■ 산업재해

-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이 업무에 관계되는 건설물, 설비, 분진 등에 의하거나 작업 또는 그 밖의 업무로 인하여 사망 또는 부상하거나 질병에 걸리는 것

■ 중대재해

- 산업재해 중 사망 등 재해 정도가 심하거나 다수의 재해자가 발생한 경우

■ 근로자

-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사업주

-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 근로자대표

- 노동조합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 :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 도급

- 명칭에 관계없이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타인에게 맡기는 계약

■ 도급인

-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하는 사업주

■ 수급인

- 도급인으로부터 물건의 제조, 건설, 수리 또는 서비스의 제공 그 밖의 업무를 도급받은 사업주

■ 관계수급인

- 도급이 여러 단계에 걸쳐 체결된 경우에 각 단계별로 도급받은 사업주 전부

■ 건설공사발주자

- 건설공사를 도급하는 자

■ 안전보건진단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잠재적 위험성을 발견하고 그 개선대책을 수립 할 목적으로 조사, 평가하는 것

■ 작업환경측정

- 작업환경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해당 근로자 또는 작업장에 대하여 사업주가 유해인자에 대한 측정 계획을 수립한 후 시료를 채취하고 분석, 평가하는 것

2. 사업주와 근로자의 의무

1) 사업주의 의무

가.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

①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

■ 사업주

- 근로자를 이용하여 사업을 하는 자
- 특수형태근로종사자로부터 노무를 제공 받는 자
- 물건의 수거 · 배달 등을 중개하는 자

■ 사업주의 일반적인 의무

- 산업재해예방기준 준수
- 쾌적한 작업환경의 조성 및 근로조건 개선
- 사업장의 안전 · 보건에 관한 정보를 근로자에게 제공

② 특정 사업주의 의무

■ 특정 사업주

- 기계, 기구와 그 밖의 설비를 설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자
- 원재료 등을 제조, 수입하는 자
- 건설물을 발주, 설계, 건설하는 자

■ 특정 사업주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의한 명령에서 정하는 기준 준수
- 사용되는 물건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산업재해 방지를 위해 필요한 조치

나. 안전보건관리체제

① 안전보건관리체제의 구축 의무

- 사업주를 중심으로 한 자율적 안전보건관리
-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장단위의 산재 예방활동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보건총괄책임자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관리자, 산업보건의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
- 안전보건관리 규정
- 매년 회사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 이사회 보고 및 승인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성실 이행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비용, 시설, 인원 등의 사항 포함

② 안전보건관리체제 구축을 위한 담당자와 책임자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 자율적인 재해예방활동을 촉진시키기 위해 당해 사업을 실질적으로 총괄, 관리하는 사람

■ 안전 보건총괄책임자

- 관계수급인 근로자가 도급인의 사업장에서 작업을 하는 경우 도급인의 근로자와 관계수급인 근로자의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업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사람

■ 관리감독자

- 사업장의 생산과 관련되는 업무와 그 소속 직원을 직접 지휘·감독하는 직위에 있는 사람

■ 안전관리자

- 안전에 관하여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보건관리자

- 보건에 관한 기술적인 사항에 관하여 사업주 또는 안전보건관리책임자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산업보건의

- 근로자의 건강관리나 그 밖에 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지도하는 사람

■ 안전보건관리담당자

-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사업주를 보좌하고 관리감독자에게 지도, 조언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 안전관리자 또는 보건관리자가 있거나 이를 두어야 하는 경우 제외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중요 사항을 심의, 의결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

■ 도급사업 안전보건 협의체

- 도급인과 수급인을 구성원으로 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 도급사업 안전보건 노사 협의체

- 공사금액 120억 이상의 건설 공사 현장에 근로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이 같은 수로 구성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협의체

③ 안전보건체제 구축을 위한 규정 작성 및 준수

■ 사업장의 안전 및 보건을 유지하기 위한 안전관리 규정 작성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관리조직과 그 직무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교육에 관한 사항
- 작업장의 안전 및 보건 관리에 관한 사항
- 사고 조사 및 대책 수립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사업주와 근로자는 작성된 안전보건관리 규정 준수

다. 안전보건교육

① 사업주의 안전보건교육에 대한 의무

-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
 - 소속 근로자에게 정기교육,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등 안전보건교육 실시
 -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등록한 안전보건교육기관에 위탁 가능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 건설업의 사업주가 건설 일용근로자 채용 시
 - 안전보건교육기관이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직무교육
 - 안전보건관리책임자,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 안전보건관리담당자 등 안전보건교육기관에서 직무와 관련한 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함

라. 유해·위험 방지 조치

① 유해·위험 방지 조치를 위한 사업주의 의무

- 법령 요지의 게시 등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의 요지 및 안전보건관리규정을 각 사업장의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갖추어 두어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함
- 근로자대표의 통지 요청
 - 근로자대표는 사업주에게 다음의 통지를 요청할 수 있고 사업주는 이에 성실히 따라야 함
 - 산업안전보건위원회 의결사항
 - 안전보건진단 결과에 관한 사항
 - 안전보건개선계획의 수립, 시행에 관한 사항
 - 도급인의 이행사항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사항
 - 작업환경측정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안전 및 보건에 관한 사항
 - 안전표시 설치 · 부착 등의 의무
- 안전보건표지를 근로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설치하거나 부착
- 외국인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는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모국어로 작성
 - 안전보건표지
- 다음의 사항을 그림, 기호 및 글자 등으로 나타낸 표지
- 유해하거나 위험한 장소 · 시설 · 물질에 대한 경고
- 비상시에 대처하기 위한 지시 · 안내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을 고취하기 위한 사항
- 종류, 형태, 색채, 용도 및 설치 · 부착 장소,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함
- 산업재해 기록·보존의 의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 등을 기록하여 보존하여야 함
- 산업재해 기록 등
- 다음의 사항을 기록 · 보존
- 사업장의 개요 및 근로자의 인적사항
- 재해 발생의 일시 및 장소
- 재해 발생의 원인 및 과정
- 재해 재발방지 계획
- 산업재해조사표 사본을 보존하거나 요양신청서의 사본에 재해 재발방지 계획을 첨부하여 보존한 경우 제외
- 보고의 의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
- 발생 개요 · 원인 및 보고 시기, 재발방지 계획 등
- 산업재해 발생보고
-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 → 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산업재해 조사표를 작성 제출
- 근로자 대표의 확인 필요 → 근로자 대표의 이견이 있는 경우 그 내용 첨부
- 중대재해 발생보고
- 중대 재해가 발생한 경우 다음의 사항을 지체 없이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전화, 팩스 또는 그 밖에 적절한 방법으로 보고

- 발생개요 및 피해 상황
- 조치 및 전망
- 그 밖의 중요한 사항

마. 다양한 고용형태에서의 산업재해 예방

① 고용형태에 따르는 산업재해 예방에서 사업주의 의무

■ 유해한 작업의 도급 금지

-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에 유해하거나 위험한 작업 자신의 사업장에서 수급인의 근로자가 작업하는 것 금지
- 일시·간헐적으로 하는 작업을 도급하는 경우
- 수급인이 보유한 기술이 전문적이고 사업주의 사업운영에 필수 불가결한 경우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의 승인을 받은 경우

■ 건설공사 단계에서 발주자 조치 사항

- 계획단계 : 기본안전대장 작성
- 설계단계 : 설계안전보건대장 작성 확인
- 시공단계 : 공사안전보건대장 작성 및 이행여부 확인
- 안전보건 전문가에게 내용의 적정성 등 확인
- 적정한 비용과 시간을 계산 설정

■ 건설공사 도급인 조치 사항

- 타워 크레인 등 설치, 작동 중이거나 설치, 해체, 조립 시 안전·보건조치
- 고용노동부에 등록한 자에게 타워 크레인 설치, 해체 작업 위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산업재해 예방

- 안전조치 및 보건 조치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 계약의 형식에 관계없이 근로자와 유사하게 노무를 제공하여 업무상의 재해로부터 보호할 필요가 있음에도 「근로기준법」 등이 적용되지 아니하는 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사람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종에 종사할 것
- 주로 하나의 사업에 노무를 상시적으로 제공하고 보수를 받아 생활할 것
- 노무를 제공할 때 타인을 사용하지 아니할 것

■ 배달종사자에 대한 안전조치

- 이동통신 단말장치로 물건의 수거, 배달 등을 중개하는 사람은 그 중개를 통하여 이륜자동차로 물건을 수거, 배달 등을 하는 사람에 대한 산업재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안전조치 및 보건조치를 해야 함

바. 시행 예정

① 사업주의 의무와 관련된 조항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 수립
- 일정규모 이상의 주식회사 대표이사는 매년 회사의 안전, 보건 계획을 수립하여 이사회에 보고하고 승인을 받아야 함
- 안전 및 보건에 관한 계획을 성실하게 이행해야 한다.
- 물질안전보건자료 작성·비치
- 화학물질 또는 이를 함유한 혼합물의 제조, 수입하는 자가 MSDS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
- MSDS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정보 비공개 시 고용노동부 장관 사전 승인

2) 근로자의 의무

가. 근로자의 의무

① 근로자의 일반 의무

- 산업안전보건법과 이 법에 따른 명령으로 정하는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기준을 준수
- 사업주 또는 근로감독관, 공단 등 관계인이 실시하는 산업재해 예방에 관한 조치에 따라야 함

② 안전보건교육 이수

- 사업주가 실시하는 안전보건교육 이수
- 정기, 채용 시, 작업내용 변경 시, 특별작업 시
- 건설 일용근로자의 경우 기초 안전보건교육 이수
- 건설사업주가 교육기관을 통해 실시
- 물질안전보건자료에 관한 교육 이수
- 물질안전보건자료 대상 물질 제조, 사용, 운반 또는 저장하는 작업에 근로자 배치
- 새로운 물질안전보건자료 도입
- 유해성·위험성 정보 변경

③ 건강진단 이행

-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함

- 일반건강진단
- 특수건강진단
- 임시건강진단 명령 등
 - 지정한 건강진단기관이 아닌 곳으로부터 이에 상응하는 건강진단을 받아 그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사업주에게 제출하는 경우
- 사업주가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은 것으로 봄
- ④ 방호조치 해체 등에 필요한 조치
 - 위험 기계·기구에 설치된 방호조치에 대한 준수사항
- 방호조치를 해체하려는 경우 : 사업주의 허가를 받아 해체
- 방호조치를 해체한 후 그 사유가 소멸된 경우 : 지체 없이 원상으로 회복
- 방호조치의 기능이 상실된 것을 발견한 경우 : 지체 없이 사업주에게 신고
- ⑤ 보호구 착용
 - 유해·위험작업으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사업주가 제공한 보호구를 상황에 맞게 착용
- 안전모 :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또는 근로자가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작업
- 안전대 : 높이 또는 깊이 2미터 이상의 추락할 위험이 있는 장소에서 하는 작업
- 안전화 : 물체의 낙하 · 충격, 물체에의 끼임, 감전 또는 정전기의 대전에 의한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경 :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보안면 : 용접 시 불꽃이나 물체가 흩날릴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열복 : 고열에 의한 화상 등의 위험이 있는 작업
- 방진마스크: 선창 등에서 분진이 심하게 발생하는 하역작업
- 방한모 · 방한복 · 방한화 · 방한장갑 : 섭씨 영하 18도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는 하역 작업
- 승차용 안전모 : 물건 운반을 하거나 수거, 배달하기 위해 이륜자동차를 운행하는 작업
- ⑥ 근로자의 작업 중지
 - 산업재해가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는 경우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할 수 있음
 - 지체 없이 그 사실을 관리감독자 또는 부서의 장에게 보고
 - 보고를 받으면 안전 및 보건에 관하여 필요한 조치
 - 사업주는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근로자가 믿을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있을 때
- 작업을 중지하고 대피한 근로자에 대하여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 금지
- ⑦ 그 밖의 준수사항

- 산업안전보건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사항을 성실하게 이행
- 역학조사 실시 시 협조해야 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 방해, 기피 금지
- 공정안전보고서 이행
- 안전보건개선계획 준수
- 작업환경측정 신뢰성 평가 시 적극 협조

3. 산업안전보건법의 벌칙

1) 벌칙의 의의와 유형

가. 벌칙

- 벌칙
 - 법령만으로는 법령 준수 의지가 약화될 수밖에 없어 벌칙을 두어 법적의무이행 담보수단으로 법령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있음

나. 벌칙의 유형

유형	행정형벌	행정질서벌
종류	징역 또는 벌금	과태료, 범칙금
집행 절차	1. 사법경찰관의 수사 및 사건 송치 2. 검사의 기소 3. 법원의 재판을 통한 확정	해당 법령 소관 행정관청이 부과·징수

2) 형벌

가. 형벌의 의의

→ 산업안전보건법 또는 이 법에 따른 명령 위반의 경중에 따라 6가지 형벌을 구분 규정

-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1,000만원 이하의 벌금
- 500만원 이하의 벌금

나. 양벌규정

- 법률 위반에 대해서 해당 규정의 의무이행주체를 처벌하는 것이 원칙
-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이행주체는 대부분 사업주
- 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양벌규정

다.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

- 다음의 조항을 위반하여 근로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에게 유죄의 판결을 선고하거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 200시간의 범위에서 산업재해 예방에 필요한 수강 명령을 병과 할 수 있음

3) 과태료

가. 과태료의 의의

-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부과되는 제재수단
- 산업안전보건법은 대부분 사업주를 의무 주체로 규정하고 있음
 - 원칙적으로 실제 위반행위자와 관계없이 해당 사업주가 과태료 부과대상
 - 사업주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에게 과태료 부과

나. 과태료 부과

① 과태료 부과

- 고용노동부 장관이 부과 또는 징수

② 과태료 부과 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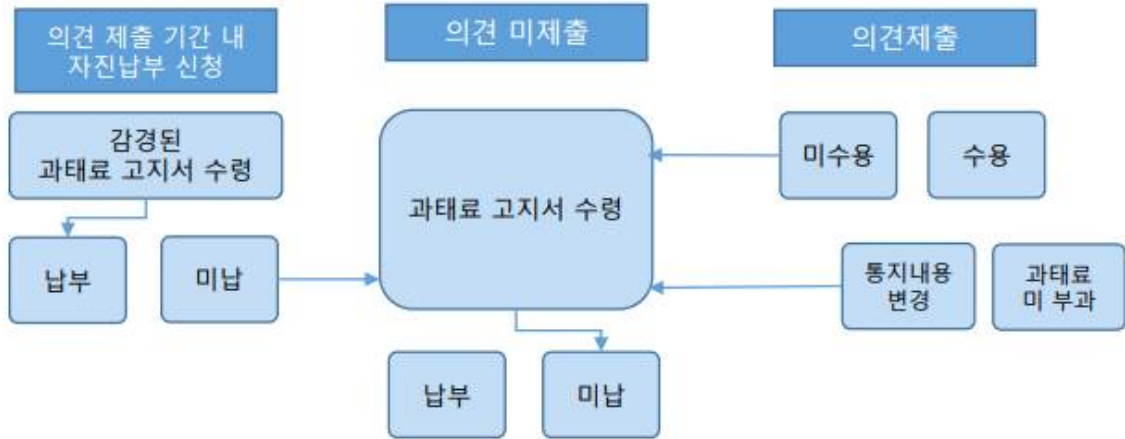
- 해당 위반행위 조사, 확인
- 사전통지서 : 위반사실, 과태료 금액, 의견 제출 방법 및 기간 등을 함께 기재
-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구술, 서면의 의견 진술 기회
- 과태료 고지서 : 의견을 제출하지 않거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때 발부

③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자진 납부 신청

- 의견 제출 기간 내에 자진 납부 신청 : 과태료 감면

사전통지서 발부

10일 이상의 의견제출기간



part 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및 보험금 청구

1.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의 이해

가. 정의

① 산업재해보상보험이란?

- 산재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각 책임을 지는 의무보험
- 사용자의 「근로기준법」상 재해보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가가 사업주로부터 소정의 보험료를 징수하여 그 기금(재원)으로 사업주를 대신하여 산재근로자에게 보상을 해주는 제도

나. 목적

① 신속 · 공정한 재해보상

- 업무상재해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한 재해보상 실시

② 인간다운 생활보장

- 재해근로자의 재활 및 사회복귀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보험시설 설치와 재해예방, 각종 근로복지 사업을 추진

③ 안정된 기업활동

- 불의의 재해로 사업주가 과중한 경제적 부담을 지게 되는 위험을 분산 · 경감시켜 안정된 기업 활동 도움

다. 필요성

① 사회적 문제

- 1960년대 본격적 공업화 시작 → 산업재해 급격한 증가 → 근로자의 건강뿐만 아니라 가족을 파괴하는 등 사회적 문제 발생
- 산업재해로부터 근로자를 보호해야 할 필요성 제기

② 민사소송의 어려움

- 산업재해발생 → 비용과시간소요 → 민사소송제기, 승소 → 충분한 배상이 어려운 경우 발생 → 배상

③ 근로기준법의 한계

- 근로기준법에 의거 사용자의 고의 · 과실과 상관없이, 일정 요건에 따라 결정된 보상액을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하여 근로자가 신속한 재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함
- 사용자가 이행하지 않거나 대형사고 등으로 도산된 경우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

아 보험제도의 필요성이 대두됨

- 1964년 최초의 사회보험인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 도입

라. 특성

① 무과실 책임주의

-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에 대해 사용자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보상을 하도록 함
- 근로자의 과실에 대해서도 과실상계를 하지 않고 보상하도록 함

② 정률보상방식

- 피재근로자의 연령 · 직종 · 근무 기간 등의 제반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당해 피재근로자의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획일적으로 산정하여 보상하는 방식

③ 강제사회보험

- 사용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산재보험 적용 및 보험료 징수가 강제됨
- 이에 따라 실제 가입 여부와 관계없이 가입의무대상 사업장 소속 피재근로자라면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

마. 운영원리

① 보험사업집행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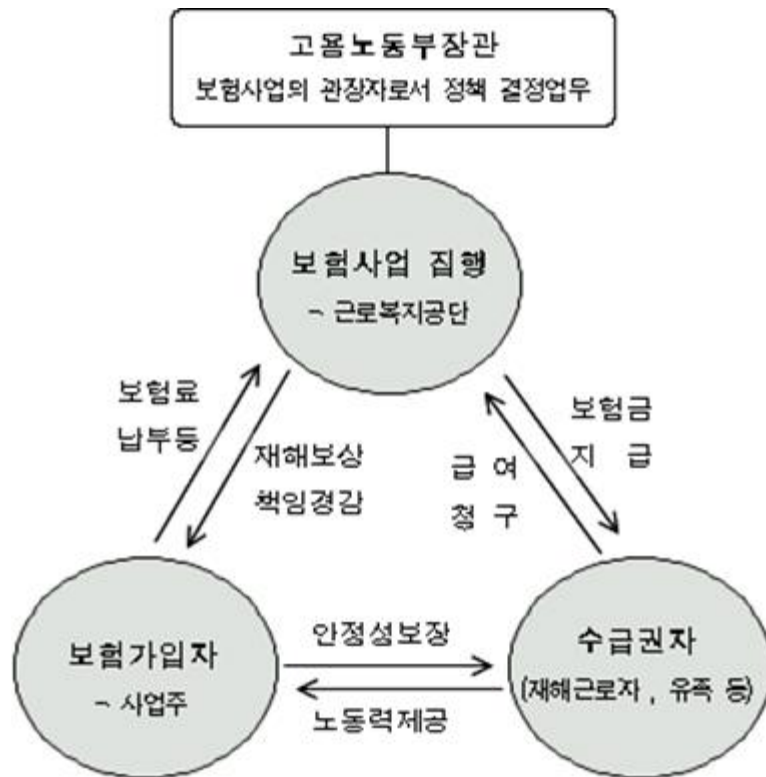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2조는 산재보험 사업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관장하도록 정하고 있음
- 고용노동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근로복지공단(동법 제10조)이 실제 사업 집행

② 보험가입자

- 사업주가 보험가입자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규정하고 있는 보험료납부 등 제반 의무를 지님

③ 수급권자

- 수급권자란 보험급여를 수급할 권리가 있는 자
- 보험가입자는 사업주지만 실제 산업재해가 발생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는 재해를 당한 근로자 혹은 그 유족



바. 주요 사업

① 재해보상 (보험급여)

- 근로자의 산업재해에 대한 신속하고 공정한 보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질병 및 부상 정도 등에 따라 일정률의 보험급여를 지급하는 사업

- 요양급여
- 휴업급여
- 장해급여
- 간병급여
- 유족급여
- 상병(傷病)보상연금
- 장례비
- 직업재활급여

② 재활사업

- 산재장애인의 성공적인 직업복귀 및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
- 맞춤형 통합서비스
- 직업훈련비용 · 수당 지원 사업

- 직장복귀지원금
-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지급
- 창업지원사업
- 재활스포츠 지원사업
- 의료재활지원 사업 (후유 증상관리)
- 사회적응프로그램운영 사업
- 심리상담
- 희망찾기 프로그램 및 사회적응 프로그램

③ 복지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일반근로자와 산재 근로자의 복지를 위한 사업
- 일반 근로자
 - 근로자장학사업
 - 근로자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 임금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사업
 - 근로자 여가활동 지원사업
 - 직장보육시설 설치비용 융자 및 지원사업
 - 여성고용환경개선자금 융자사업 등
- 산재 근로자
 - 산업재해근로자 및 자녀 장학사업
 - 산재근로자 및 자녀 대학생 학자금 대부사업
 - 산재근로자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 등

2. 산업재해보상 청구

1) 보험급여 청구절차

가. 제출서류준비

- 제출장소
 - 근로복지공단
- 준비주체
 - 재해를 당한 근로자
 - 유족급여의 경우 유족이 청구할 수 있음
 - 근로자 측에서 관련 서류 및 보험급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사업주의 조력
 - 업무상 재해를 입증할 때 필요한 업무 및 출퇴근 관련 자료 제공

- 근로자의 임금 등의 확인에 필요한 임금관련 자료 제공

나. 접수 및 심의

- 조사주체
 - 근로복지공단 산재업무 담당자
- 추가로 필요한 자료 등을 근로자 측 혹은 사업주에게 요청
- 필요한 경우 재해자, 목격자, 관리자 등에 대해 출석, 유선, 방문 등의 형태로 조사 진행
- 업무상 질병 : 질병판정위원회
- 심의제외 질병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규칙 제7조)
 - 진폐증 및 이황화탄소 중독증
 - 유해·위험요인에 일시적으로 다량 노출되어 나타나는 급성 중독 증상 또는 소견 등의 질병
 - 그 밖에 업무와 그 질병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는지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로서 공단이 정하는 질병
- 사업주의 조력
 - 근로복지공단에서 사실 확인 등을 위한 자료제출 요청 혹은 관련자 출석 조사 요청 등이 있는 경우에 사업주는 이에 응할 수 있음

다. 보험급여 부지급 결정 이후

라. 심사청구

- 심사청구 제기기간
 - 보험급여 결정 등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 심사청구 접수
 -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소속 기관(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
 -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공단본부 산재심사실로 보내도록 함
- 심사 주체
 - 산재심사실과 심사위원회에서 심사청구 심의 진행
 - 아래 심사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만 산재심사실에서 심의를 진행
- 심사 결정
 - 심사 결정은 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 심사위원회 심의 제외 대상
 -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심사위원회가 심의하지 않으나, 제외대상에 해당하더라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①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업무상 질병의 인정 여부가 결정된 경우
- ② 진폐인 경우
- ③ 이황화탄소 중독인 경우
- ④ 진료비 또는 약제비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 ⑤ 그 밖에 심사 청구의 대상이 되는 보험급여결정 등이 적법한지를 명백히 밝힐 수 있는 경우

마. 재심사청구

■ 재심사청구 제기기간

- 심사 청구에 대한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 제기
- 단, 업무상질병판정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심사 청구를 제기하지 않고 재심사 청구를 제기할 수 있음

■ 재심사청구 접수

- 재심사 청구는 그 보험급여 결정 등을 한 근로복지공단 지사에 접수
- 소속 기관은 5일 이내에 의견서를 첨부하여 노동부의 재심사위원회로 보내도록 함

■ 재심사 결정 기한

- 재심사 결정은 재심사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하여야 함
- 부득이한 경우 1차에 한하여 20일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연장 가능

바. 행정소송

■ 행정소송 접수

- 행정소송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함

■ 행정소송 제기 방법

-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거치지 않고 바로 소송 제기
- 임의로 심사청구 및 재심사청구를 모두 거친 후에 소송 제기
- 임의로 심사청구만 하고 그 결정을 받은 후 바로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음

2) 소멸시효

가. 소멸시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12조(시효)

- 이 법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말미암아 소멸한다.

① 제36조제1항에 따른 보험급여를 받을 권리

- 이 중 '장해급여, 유족급여, 장례비, 진폐보상연금 및 진폐유족연금'은 시효 기간 5

년

- ② 제45조에 따른 산재보험 의료기관의 권리
- ③ 제46조에 따른 약국의 권리
- ④ 제89조에 따른 보험가입자의 권리
- ⑤ 제90조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등의 권리
 - 재해사실 상태를 장기간 방치할 경우 증거보전이 곤란하게 되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고, 권리를 주장하지 않는 자는 보호를 하지 않는데 그 취지가 있음

3. 산업재해보상 보험급여

1) 요양 중 산업재해보상

가. 요양급여

- ① 정의
 -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당한 경우 요양에 필요한 비용을 지급
 - 현물로 지급하는 것이 원칙
 - 진료비, 입원비, 약제비 등은 공단이 각 병원 및 약국 등에 직접 지급
- ② 지급 요건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일 것
 - 4일 이상의 요양일 것
- ③ 3일 이내 일 경우
 - 업무상의 부상 또는 질병이 3일 이내의 요양으로 치유될 수 있으면 행정업무의 번거로움을 고려하여 요양급여를 지급하지 않음
 - 하지만, 「근로기준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주에게 요양보상의무가 으므로 사업주에 의해 보상을 받을 수 있음
- ④ 지급기간
 - 상병이 치유되거나 상병 상태가 고정되어 더 이상의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을 때까지 지급
- ⑤ 지급범위
 - 진찰 및 검사
 - 약제 또는 진료재료와 의지 그 밖의 보조기의 지급
 - 처치 및 수술 그 밖의 치료
 - 재활치료
 - 입원
 - 간호 및 간병
 - 이송
 - 그 밖에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항 등 필요한 제반 비용을 지급하도록 함

⑥ 산재보험 요양비용으로 지급할 수 없는 비급여 항목

-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치료 목적이 아닌 진료 또는 투약
- 국민건강보험법건강보험법' 규정에서 정하지 않은 요양급여
- 상급병실 사용료 차액 (다만, ① 종합병원 이상에서 요양하는 경우로서 상병상태가 응급진료, 수술 등으로 입원요양이 필요하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 상급병실을 사용하는 경우 7일의 범위에서 인정 ② 증상이 위중하여 절대안정이 필요하고, 의사 또는 간호사가 상시 감시하면서 수시로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나, 중환자실 · 격리실 등 집중치료실이 없거나 여유 병상이 없어 불가피하게 상급병실을 사용한 경우 인정)

나. 휴업급여

① 정의

- 업무상 재해를 당한 근로자가 요양기간 동안 일을 하지 못해 임금을 받지 못하는 기간 동안 피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을 보호하기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

② 지급 요건

- 업무상의 사유에 의한 부상 또는 질병으로 요양 중일 것
- 4일 이상 취업이 불가능할 것
- 임금을 받지 못할 것

③ 지급 기간, 산정

- 요양으로 취업하지 못하는 기간까지에 대해 지급
- 요양기간 중 취업하지 못한 기간에 대하여 1일 평균임금의 70%를 지급

④ 지급금액

■ 부분휴업급여

- 상병이 경미하여 근무하면서 요양을 받는 근로자에게는 부분 휴업급여를 지급
- 평균임금에서 그 취업한 날 또는 취업한 시간에 대한 임금을 뺀 금액의 100분의 90에 상당하는 금액

■ 고령자 휴업급여

- 61세부터 휴업급여를 매년 4%씩 감액하여 65세 이후에는 20%를 감액 (형평성 위해)
- 단, 61세 이후 취업 중 업무상 재해로 요양하거나 61세 전에 업무상 질병으로 장해급여를 받은 자가 61세 이후 최초로 요양하는 경우 : 요양을 시작한 날부터 2년간 감액을 하지 않음.

■ 저소득근로자 휴업급여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평균임금의 70%) ≤ 최저 보상기준 금액의 80%인 경우
= 평균임금의 90%를 휴업급여로 지급
- 제 1항에 따라 산정한지급액 < 최저임금액 = 최저임금액을 1일당 휴업급여 지급

액으로 함

- 평균임금의 90% >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80%인 경우 = 최저보상기준 금액의 80%를 휴업급여로 함

다. 상병보상연금

① 정의

- 요양 시작 후 2년이 경과한 후에도 계속 요양이 필요한 재해 근로자와 그 가족의 생활 안정을 위해 휴업급여를 중단하고 보상수준이 높은 연금을 지급

② 지급 요건

- 요양급여를 받는 근로자가 요양을 시작한지 2년이 지난날 이후에도 상병이 치유되지 않은 상태
- 그 부상이나 질병에 따른 중증요양상태의 정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증요양상태등급 기준에 해당할 것
- 요양으로 인하여 취업하지 못하였을 것

③ 지급금액

- 원칙 : 휴업급여 중단 후 아래의 표와 같이 지급

중증요양상태등급	상병보상연금
제1급	평균임금의 329일분
제2급	평균임금의 291일분
제3급	평균임금의 257일분

- 저소득근로자의 상병보상연금

- 근로자의 평균임금 < 최저임금액의 70%(1일당 휴업급여액) = 최저임금액의 70%를 근로자의 평균임금으로 함
- 상병보상연금액 ÷ 365 < 1일당 휴업급여 지급액 = 저소득 근로자의 휴업급여지급액을 1일당 상병보상연금액으로 함

- 고령자의 상병보상연금

- 감액 지급 해당 연령인 61세에 도달한 날부터 매년 4%씩 감액
- 평균임금 X (중증요양상태등급일수/365-(연령에 따른 %))

2) 요양 종료 후 산업재해보상

가. 장애급여

① 정의

- 노동능력 상실에 대한 소득 보전을 위해 지급하는 보험급여
- 업무상 부상이나 질병으로 인해 장애가 남은 경우 장애 정도에 따라 법이 정한 금액을 지급 됨

② 지급 요건

- 업무상 재해가 치유상태에 있을 것 (부상 또는 질병이 완치된 상태이거나 계속 치료해도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없게 되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 이른 것)
 - 장애가 남을 것
 - 신체의 장애가 신체장애등급표에 해당하는 상태일 것
- 법이 정하고 있는 장애등급표의 최하위 기준인 14급 이상의 장애에 해당해야 함

③ 청구 가능 시점

- 요양이 종료된 후 증상이 고정된 시점부터 청구 가능

④ 지급형태

- 신체장애 정도가 심하여 3급 이상이 되는 경우는 연금으로 지급
- 8급 이하의 장애는 일시금으로 지급

장애등급	지급형태	
	원칙	예외
1급~3급	-연금으로만 지급 -단, 4년분의 1/2해당 금액을 선 지급 받을 수 있음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가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 일시금 지급
4급~7급	-일시금과 연금 중 선택가능 -연금선택 시 2년분의 1/2 해당 금액을 선지급 받을 수 있음	-
8급~14급	일시금으로만 지급	-

⑤ 지급금액

- 장해보상 일시금 = 평균임금 × 해당 장애등급의 장해보상일시금 일수
- 장해보상연금 = 평균임금 × 해당 장애등급의 연금일수 × 1/12 (매월지급)

나. 간병급여

① 정의

- 요양이 종료되고 난 후에도 산재근로자의 상태가 타인의 도움 없이는 생활이 힘든 경우 이를 지원하기 위한 보험급여

② 청구 방법

- 간병급여 청구서에 간병이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서를 첨부
- 근로복지공단 해당지사에 접수
- 공단에서 상시 또는 수시 간병필요 여부 등을 파악
- 고용노동부장관 고시금액에 따른 간병급여를 지급

③ 지급요건

- 상시 간병급여 : 간병급여는 타인의 간병이 항상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

- 수시 간병급여 : 수시로 간병이 필요한 사람에게 지급

④ 지급금액

- 간병급여액은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으로 함
- 수시간병급여의 금액은 상시간병급여의 금액의 2/3에 해당하는 금액으로 함
- 다만, 간병급여 대상자가 무료 요양소 등에 들어가 간병비용을 지출하지 않았거나, 고시된 간병급여액보다 적은 금액을 지출한 경우에는 실제 지출한 금액만 지급함

- 고용노동부 장관은 매 3년이 되는 시점에서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

다. 직업재활급여

① 정의

- 업무상 재해로 장애가 남은 근로자의 직장복귀, 재취업 및 창업 등 사회복귀를 지원하기 위해 직업 훈련 등에 사용되는 비용을 지원하는 것

② 종류

- 훈련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직업훈련비용 및 직업훈련수당
-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직장복귀지원금,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③ 직업훈련비용 · 수당지원 (산재근로자 지원)

■ 지원대상

- 장애등급 제1급~제12급에 해당자 또는 업무상 사유로 발생한 부상 또는 질병의 상태가 치유 후에도 장애등급 제1급~제12급까지 중 하나에 해당할 것
- 취업을 하지 않았을 것
- 다른 직업훈련을 받고 있지 아니할 것
- 직업복귀계획을 수립하였을 것

■ 지원금액

- 직업훈련비용
- 수강료 · 재료비 또는 교재비 등을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금액 범위 내에서 공단과 해당 직업훈련기관 사이에 계약한 항목 및 금액만큼 지급
- 직업훈련수당
- 출석률 80% 이상인 경우 지급
- 1일당 최저임금에 상당하는 금액으로 지급
- 직업훈련수당을 받는 자가 장해보상연금을 받는 경우

④ 직장복귀지원금 등 (사업주 지원)

- 장애등급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을 원 직장에 복귀시켜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상 고용을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 직장적응훈련비 및 재활운동비
- 장애등급 제1급~제12급 산재장해인을 원 직장에 복귀시킴
- 요양종결일 또는 직장복귀일부터 6개월 이내에 원래의 직무수행이나 다른 직무로

- 전환하는데에 필요한 직장적응훈련이나 재활운동을 실시함
- 이를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

3) 사망 시 산업재해보상보험

가. 유족급여

① 정의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에 사망 당시 유족에게 지급하는 급여
- 사망한 근로자가 생전에 부양하고 있던 가족들을 당장의 생계 위협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보험급여

② 지급 형태

- 유족급여는 연금으로 지급 (수급권자가 원할 경우 일시금 50%, 연금 50% 가능)
- 유족보상연금 수급자격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일시금으로 지급

③ 지급 요건

- 업무상 사망
 - 업무상의 사유로 인한 사고 등으로 즉사한 경우
 -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 중에 사망한 경우
 - 부상 또는 질병이 악화하여 사망한 경우
 - 치유되었던 부상 또는 질병이 재발·악화하여 사망한 경우
- 업무상 사망으로 추정 될 것
 - 선박이 침몰·전복·멸실 또는 행방불명되거나 항공기가 추락·멸실 또는 행방불명되는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 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그 사고 발생일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 항행 중인 선박 또는 항공기에 타고 있던 근로자가 행방불명되어 그 생사가 행방불명 된 날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 천재지변, 화재, 구조물 등의 붕괴, 그 밖의 각종 사고의 현장에 있던 근로자의 생사가 사고 발생일부터 3개월간 밝혀지지 아니한 경우

< 사고가 발생 한 날 또는 행방불명 된 날에 사망한 것으로 추정 >

④ 유족보상연금

- 전액연금
 - 기본금액과 가산금액을 합하여 산정
 - 유족보상연금액 = 기본금액(급여기초연액의 47%) + 가산금액(급여기초연액의 5% ~ 20%)
- 반액연금
 - 연금 수급권자가 신청할 경우 유족보상 일시금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일시금으로 지급받을 수 있음
 - 유족보상연금은 100분을 50을 감액하여 지급

⑤ 유족보상 일시금

- 연금수급자격자가 없거나, 유족이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로서 외국에서 거주하는 경우에 지급
- 평균임금의 1,300일분에 상당하는 금액

나. 장례비

① 정의

- 근로자가 업무상의 사유로 사망한 경우 장례비용으로 지급하는 급여

② 수급권자

- 원칙적으로 그 장례를 지낸 유족에게 지급
- 장례를 지낼 유족이 없거나 유족의 행방불명 등으로 부득이하게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낸 경우

- 장례비의 범위 내에서 지출 비용을 그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하도록 함

③ 지급 금액

- 유족이 장례를 지내는 경우

- 평균임금 x 120일분

- 유족이 아닌 자가 장례를 지내는 경우

- (평균임금 x 120일분)의 범위 내에서 실제 드는 비용을 장례를 지낸 자에게 지급

- 최고금액과 최저금액 (2022년 1월 1일 기준)

- 장례비 최고금액 : 17,241,680원

- 장례비 최저금액 : 12,460,160원

- 장례비가 최고금액을 초과하거나 최저금액에 미달하면 그 최고금액 또는 최저금액을 각각의 장례비로 함

4) 진폐에 대한 보험급여

- 진폐보상연금

- 진폐근로자에게 진폐장해등급별 진폐장해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91조의3제1항·제2항)

- 장해연금 수급권자 중 장해상태가 호전되거나 악화되어 장해등급이 변경 될 가능성이 있는 경우

- 변경 된 날이 속한 달의 다음 달부터 기초연금과 변경 된 진폐장해등급에 해당하는 진폐장해연금을 합산한 금액을 지급한다.

- 진폐유족연금

- 진폐근로자가 진폐로 사망한 경우 유족에게 지급하는 것

- 사망 당시 진폐근로자에게 지급하고 있거나 지급하기로 결정된 진폐보상연금과 같은 금액으로 지급

- 진폐유족연금은 산재보험법 제62조제2항 및 별표3에 따라 산정한 유족보상연금을 초과할 수 없음